



농림부

일본, 한국산 닭고기 등 수입 재개

농림부는 지난해 11월 22일 전북 익산 지역에서 고병원성 A 발생에 따라 수출이 중단된 닭고기 등에 대해 일본 정부가 7월 25일부터 다시 수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닭고기 등의 일본 수출 재개는 금년 6월 18일자로 우리 정부가 국내 고병원성 A 청정 선언과 동시에 일본 등 주요 수출상대국에 한국산 닭고기 등의 수입재개를 요청해 성사된 것으로, 일본 정부는 닭고기·알·병아리가 7월 25일 이후에 한국에서 도축·생산되었을 경우 일본으로 수출이 가능함을 알려왔다고 농림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열처리 가공된 한국산 삼계탕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4일에 이미 대일 수출이 재개된 바 있다.

2006년에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닭고기 등 가금육은 8,360천\$(2,969톤)이며, 그 중 63%에 해당되는 5,234천\$(1,294톤)이 일본으로 수출된 바 있다.

■ 가금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개정안 입안예고

농림부는 2006년 11월에서 2007년 3월까지 전북 익산 등지에서 발생한 가금인플루엔자 긴급방역 추진 과정에서 도출된 방역실시요령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효율적 방역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지난 7월 25일 '가금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업계 의견수렴에 나섰다.

이번에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위험지역을 발생농장 3km 이내로 광범위하게 규정하던 것을 반경 500m부터 3km 이내로 구분해 오염지역과 위험지역을 명확히 했다.

또 방역조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선 조치 후 보고' 체계가 구축된다.

한편 과거 의사환축 발생시 시장·군수, 지방방역기관은 의사환축발생신고서를 먼저 작성해 보고토록 했지만 개정안에서는 방역관을 먼저 발생농장에 파견해 임상진단을 실시하게 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 보고토록 했다.

이와 함께 인체감염에 대한 대책도 새롭게 신설된다.

가금인플루엔자 발생시 인체감염 방지를 위한 역학조사 및 예방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국방부 및 경찰청에만 의사환축 발생사실을 통지하던 것을 질병관리본부까지 포함시키고 인체감염 방지조치 협조체계를 점검하게 된다. 또 살처분 매몰 작업에 참여한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이를 시도지사 및 질병관리본부에 통보해 정보를 공유토록 했다.

또 오염 및 위험지역에 방역조치도 대폭 강화 또는 완화된다.

우선 오염 및 위험지역내의 모든 감수성 동물의 농장 밖으로 이동금지 및 반입을 금지시키는 것은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돼지의 경우 정밀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방역관의 지도 감독 하에 도축출하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오염 지역 내 사료공장은 폐쇄하고 보관 중인 원료 및 사료는 폐기하며 위험 지역 내 위치하고 있을 경우에는 가금용 사료를 제외한 타 축종의 사료

는 생산·유통시킬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닭·오리의 분뇨를 이용해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시설은 폐쇄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이 밖에도 야생조류에서 HPAI 감염이 확인될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한 지점 중심 10km 이내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시료채취일을 기준으로 30일간 경계지역에 해당하는 방역조치를 적용하는 것이 신설됐다.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농림부 홈페이지(www.maf.go.kr)를 참조.

■ 중국·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 한국산 가금(육) 등 수입허용 요청

농림부에서는 지난 6월 18일자로 우리나라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청정국임을 선포하고 중국 및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 한국산 가금(육) 등의 수입허용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에서는 한국의 조류인플루엔자 위험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홍콩에서는 승인된 도축장에서 생산(2007. 7. 13 이후 도축)되고 시에 대한 생체·해체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야 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수출검역증명서를 첨부해 가금 및 그 생산물을 홍콩으로 수출가능(처음 3회까지는 검사)하다고 답변했다.

또한 싱가포르 정부는 한국산 가금육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한국산 가금육의 대 싱가포르 수출 시에는 수입업체가 싱가포르 관련기관에 해당물품에 대한 수입신청을 하고 싱가포르 관련기관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말레이시아 정부는 우리 정부의 수입허용 요청에 대해 가금육 수출을 희망하는 농가가 말레이시아 Veterinary Service Authority의 확인 등을 거쳐 신청해 오면 검토할 계획이라고 회신했다. 또 검역 관련 이외에도 Halal Certificate(무슬림이 먹을 수 있도록 도살되었음을 증명)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농업인, 정책자금 대출시 거래은행 선택 폭 확대

창업농지원 등 정부의 5가지 농업 관련 사업 자금을 농협이 아닌 시중은행에서도 빌릴 수 있게 된다.

농림부는 지난 7월 26일 창업농지원·신규후계농지원·후계농추가지원·농기계사후관리·축산분뇨처리시설 등 5개 사업에 배정된 농업정책자금을 내년부터 시중은행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농업인의 금융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농림부는 오는 9월 시중은행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 농업정책자금 취급 희망 은행을 모집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이들 사업 자금을 새로 지원받는 농업인은 농협 이외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고, 기존 대출자도 거래은행을 바꿀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농업정책자금 대출은 거의 농협을 통해서만 가능했으나, 지난 2004~2006년 축발기금 용자사업, 미국종합처리장(RPC)운영자금, 농기계구입자금 대출 업무가 먼저 시중은행에 개방된 바 있다.

농림부는 계속 단계적으로 시중은행이 취급할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종류를 늘려 2010년 이후에는 기금을 제외한 모든 용자사업을 시중은행에 개방할 방침이다.

작년말 현재 농업정책자금 대출 잔액은 7조5천294억원이며, 올해 지원이 예정된 자금만 5조6천264억원에 달한다.

■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시행

농림부는 지난 7월 3일 농지를 전용하지 않고도 축사시설을 농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자유구역 등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 등의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4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2007년 1월 3일 개정·공포된 농지법의 시행일에 맞춰 7월 4일부터 시행되며,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농지에 축사를 설치할 경우 전용절차를 거쳐

야 했으나, 앞으로는 전용 없이 설치가 가능해졌다.

따라서 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할 필요가 없으며,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 축사를 설치하는 절차가 크게 간소화됐다.

물론,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허가나 건축법의 건축허가 등 관련법에서 정한 일정한 행위제한은 계속 받게 된다.

둘째,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개발구역, 행정중심복합도시예정지역, 혁신도시예정지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용지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범위를 확대했다.

상기 해당지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용지에 대해 현재 일률적으로 50%를 감면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농지법령의 다른 규정에 따라 10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시설은 100%를 감면하도록 했다.

셋째, 시도지사가 1ha 범위 내에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경우 농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종전에는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 한해 농림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었으나(1ha까지), 앞으로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의 변경, 도시지역내 주거·상업·공업 시설 등의 입지를 위해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1ha까지는 시도지사가 농림부 장관의 승인없이 직접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게 됐다.

넷째, 농업인의 소득과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시설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했다.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농업기계수리시설, 유기질비료 또는 사료의 제조시설은 전용을 할 수 없는 시설이어서 농지에 설치할 수 없었으나, 이들 시설이 농업생산과 농업인 소득창출에 필요한 시설이므로 이번 농지법개정을 통해 전용절차를 거쳐 농지에 설치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농림부는 7월 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농지법령의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해 농지관리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개정 농지법령집을 발간

해 농림부 홈페이지(www.maf.go.kr 농림소식/정책자료/법령자료)에 게시,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확대 추진

농림부는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를 확대하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학교급식 관계자,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여 학교급식에 친환경 농산물의 사용이 확대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부는 특히, 학교급식 관계자들(학교장, 영양사, 학부모 등)의 인식을 제고하여 자연스럽게 학교급식에 친환경 농산물 공급이 확대되도록 유도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를 위해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역순회세미나, 우수사례 홍보전시회 등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캠페인을 전개하고, 학교급식 관계자를 대상으로 친환경 농업 현장체험을 실시해 친환경 농산물의 우수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친환경 농산물 급식 우수사례와 식단 등 영양사 매뉴얼 북 제작·배부를 통해 급식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도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또한 제4회 친환경농업대상부터는 학교급식 부문을 신설해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우수 학교에 대한 시상을 추진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업대상 및 유기질비료지원 등 정책지원사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질병관리본부와 인수공통전염병대응 공조체계 강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강문일)은 지난 7월 5일 질병관리본부 국제회의실에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질병관리본부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인수공통전염병대책위원회' 상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6개 전문분과위원회별로 향후 활동계획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특히 인플루엔자/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분과위원회에서는 '06/'07년도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해 분리 바이러스의 특성, 진단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고병원성 AI 발생시 수의·보건 양 분야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효과적으로 대처한 것에 대해서 외부 위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또한 양 기관은 동 대책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술프로그램을 마련하는 한편, 최근 사람에게서 인수공통전염병으로 문제가 되는 부루셀라증·장출혈성대장균 등 감염실태 공동조사를 추진기로 했다.

이울러 인수공통전염병의 효과적 대처를 위해 공동 방역사업 추진 등 각종 현안에 대해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 AI, 국가와 대학의 공동대응체계 강화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충남대학교 동물의학연구소는 지난 7월 9일 인수공통전염병연구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국내에 2차례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의 방역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기관으로, 그간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해 환경부 등 관련부처와 공동대

응을 해왔으며, 외부전문가와 공동연구를 통한 협동대응을 위해 2005년 4월 서울대학교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와 연구협력 양해각서(MOU)를 맺은바 있다.

충남대학교 동물의학연구소는 올해 초 국내에서는 최초로 야생철새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분리하는 등 조류인플루엔자 연구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정부차원에서도 금년 4월 조류인플루엔자 등 국가재난형 질병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민관공동의 대응기술 개발을 과학기술관계 장관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으며, 금번 양해각서는 향후 정부기관과 대학간의 협력연구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은 고병원성의 병원체를 다루기 위해서는 특수한 시설이 요구되며 국가차원의 병원체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으나 본 양해각서에는 연구시설·장비의 공유 및 연구인력의 교류가 포함되어 있어 민간부분의 연구 인프라 구축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 2007년 수의과학기술개발 연구사업 중간평가 실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7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2007년도 상반기에 수행한 92개 연구과제에 대한 중간평가회를 개최했다.

이날 평가회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부루세라 등 주요 가축전염병 및 인수공통전염병의 진단, 치료 예방을 위한 54과제, 구제역, 광우병 등 해외악성 가축전염병 사전검색 및 검역기술개발을 위한 20과제 그리고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유해물질 독성·위해성 평가, 정밀분석, 동물용 의약품 품질관리연구 등 18과제를 각 과별로 평가함에 따라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보다 깊이 있는 평가가 진행됐다.

평가위원으로 대학, 유관기관, 산업계 등 각계 관련 분야의 외부전문가와 내부 전문가가 참석해 기술수요자의 입장에서 실질적이고 심도있게 평가했다.

특히,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특성조사 및 예방제 개발', '구제역 재조합 마커백신 개발', '부루세라 병 역학 및 방제기술 개발', '천연자원을 이용한 대체 치료 및 예방제 개발연구', '동물줄기세포를 이용한 독성평가 및 유용물질 개발' 등 최근 주목받는 과제에 대해서는 한껏 고조된 관심을 반영하는 듯 내·외부 평가위원들의 질문공세가 이어져 이목이 집중됐다.

■ 식약청과 HACCP 정책발전을 위한 공조 체계 구축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7월 23일 검역원 회의실에서 우리나라 HACCP제도의 발전을 위해 식품 HACCP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명현)과 HACCP 정책발전 협의회를 개최하고 향후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첫 협의회는 양 기관의 HACCP업무 담당부서인 검역원 축산물안전과와 식약청 식품안전기준팀 직원 전원이 참석해 양 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HACCP 업무 및 제도를 소개하고 HACCP 활성화를 위한 공동 홍보방안 등 현안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관계자는 금번 협의회가 양 기관의 HACCP제도 차이점, 추진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상호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며, 향후 양 기관의 정례정책 협의회를 통해 국내 축산식품 및 식품 HACCP 제도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특별교육 개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7월 26일 축산물영업장 위생관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위생감시 활동을 수행하고자 소비자단체의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서울·경기·인천지역의 한국소비자연맹 등 9개 소비자단체소속 명예감시원 77명이 참석했으며, 주요 교육내용은 단체급식납품 축산물영업장 특별점검 결과 등 축산물 위생감시 주요추진사항, 위생감시 절차 및 방법, 축산물가공처리법 주요 개정사항 등으로 현장 위생감시 활동에 필요한 것이다.

금번 교육을 통해 명예감시원이 위생감시 현장에서 느끼는 궁금증과 소비자가 바라는 축산물위생관리 등에 대해 토론함으로써 축산물의 위생안전에 대한 이

해 및 감시활동 업무능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건의한 사항에 대해 필요한 부분은 위생감시에 활용하고, 관련 규정의 제도개선을 검토 추진할 예정이다.

검역원은 하반기에 축산물명예감시원의 순회교육을 추진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소비자와 함께 축산물 위생감시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축산과학원

검역원과 업무 및 연구협력을 위한 MOU 체결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원장 이상진)과 농림부 국립 수의과학검역원(원장 강문일)은 지난 7월 3일 축산과학원 강당에서 축산 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고 학술활동 및 연구에 필요한 인력, 시설, 실험 기자재 등을 상호교류하여 연구수준을 향상시키고자 기술협력(MOU)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기술협력(MOU) 체결 배경은 1998년 농촌진흥청 소속의 가축위생연구소가 농림부 수의과학검역원으로 통합된 이후 양 기관 간 협력 및 교류가 유기적으로 이뤄지지 못했으나, 최근(2007. 4) 고위공무원단 운영으로 양 기관의 부장급 인사교류가 시작되면서 수의(獸

醫)와 축산(畜産)분야 연구의 특성상 상호 보완적 업무 및 연구협력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인식하게 됐다.

양 기관장은 “기술협력 체결에 따라 양 기관의 관심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 활성화로 새로운 연구영역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며 “대내·외 공동 대응은 물론 고가(高價) 정밀 분석 장비 공동 활용으로 분석기간 및 예산절감 등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 축산관련 단체장 초청 간담회 개최



축산과학원은 지난 7월 10일 축산 관련 단체장 24명을 초청해 축산분야 연구사업을 소개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과 의견을 수렴코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축산과학원 개원과정 및 현황을 비롯 각 축종별(한우, 젓소, 돼지, 가금) 현안 분석과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각 단체장과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남호경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은 축산과학원의 개원을 축하하고, 이를 위한 직원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으며, 앞으로 기능과 조직 확대를 통해 명칭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부탁했다.

단체장들은 FTA 등 현안 사항에 대한 축산분야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확대, 이력추적시스템과 항생제·생산비 절감, 가축분뇨처리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단체장들의 요구에 대해 이상진 축산과학원장은 “현재 많은 부분 관련 연구원들이 노력하고 있으며 여러분의 기대에 보답하고 현안 기술개발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07년 2/4분기 인증현황 발표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도가 도입된 이후 산란계를 중심으로 인증 실적이 크게 증가하면서 본격적인 친환경 축산물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정승)은 지난 7월 19일 2007년 2/4분기 친환경 축산물 인증현황을 발표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현황을 살펴보면 유기축산물을 비롯해 전환기유기축산물, 무항생제 축산물 등 8개 축종에서 총 131개가 인증을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가 도입된 3월 이후 인증 실적이 크게 증가했다.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이 78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유기축산물은 50개소, 전환기유기축산물은 3개였다.

축종별로는 산란계가 76개로 가장 많았으며, 이중 무항생제 인증이 54개, 유기축산물은 22개였다.

다음으로는 육계로 모두 20개소 인증을 획득했으며, 이중 무항생제 11개, 유기 8개, 전환기 1개이다.

한우는 12개 중 무항생제 8개, 유기와 전환기가 각각 2개였으며, 육우는 유기 6개, 무항생제 1개 등 7개가 인증을 획득했다. 돼지의 경우 유기 4개, 무항생제 2개였으며, 젓소는 5개가 모두 유기인증을 받았다. 이 밖에도 산양은 4개, 사슴 1개가 각각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획득했다.

■ 수입산 닭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주 구속

전북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송훈면)은 수입 닭고기를 가공·처리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유명 치킨점 등에 공급한 전북 익산시 소재 G식품 대표 K씨에 대해 지난 7월 4일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소비자들이 국내산 닭고기를 선호하고, 국내산과 수입산을 구별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해 부당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2005년 9월부터 미국산과 브라질산 닭고기 약 90톤을 구입, 2006년 3월부터 닭고기 정육제품 약 23.1톤을 가공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시내 유명 치킨 체인점에 공급했으며, 또한 미국산과 브라질산 닭고기로 양념 닭고기 제품 약 38.6톤을 제조하여 원산지를 덴마크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K씨는 수입산 닭을 양념 제조할 경우 거래점과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식별할 수 없고, 국내산을 선호하는 점을 이용해 국내산 보다 가격이 저렴한 수입 닭고기를 국내산으로 판매했다.

농관원은 해마다 반복되는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국내 닭 사육 농가들의 엄청난 피해와 절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당한 이익에 눈이 멀어 양축농가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닭고기 유통시장을 문란하게 해 관련법에 의해 엄중 처벌하고자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영장실질검사를 마쳐 2007년 7월 4일 최종 구속했다고 밝혔다.

〈참고사항〉

■ 원산지표시위반 벌칙

- 원산지 허위표시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원산지 미표시 : 최소 5만원 최고 1천만원 과태료

■ 농산물원산지표시 부정유통신고 안내

- 전국 어디서나 전화 국번없이 「1588-8112」 또는 「241-6060」

- 인터넷 「www.naqs.go.kr」로 신고
- 부정유통신고 고발포상금 : 최하 5만원부터 최고 200만원
지금

한국식품연구원

주소변경

한국식품연구원(원장 김동수) 청사부지에 대한 지번이 지난 6월 25일자로 아래와 같이 변경됐다. 전화번호는 전과 동일하다.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16번지
- 전화 : (031)780-9114
- 팩스 : (031)709-9876

제주축산진흥원

동물유전자원 관리기관으로 첫 지정

제주도축산진흥원이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동물유전자원 관리기관으로 지정됐다.

동물유전자원 관리기관은 동물유전자원 보존 및 이용을 위한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이 특정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제주도축산진흥원은 1986년도부터 제주도내에 산재하고 있는 제주흑우·재래돼지·재래닭 등 재래가축들을 수집, 보존·관리해오고 있으며 재래가축 실용화를 위해 재래돼지 3,718마리, 재래닭 3만6,632마리를 분양했다. 

“회원사의 소식을 보내주세요”



「월간 닭고기」에서는 ‘회원사 소식’ ‘업계 소식’ ‘회원사 탐방’ ‘회원사 제품소개’ 등의 코너를 통해 본회 회원사의 소식이나 회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사 홍보를 원하시는 회원사(준회원사, 농가회원 포함)께서는 단신이나 회사소개 내용을 매달 20일까지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육계 및 계육관련 기관·단체 및 업체에서도 홍보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내용을 작성하시어 매달 20일까지 보내주시면 홍보해 드리겠습니다.

★ 소식 보내실 곳

- 취재문의 : (031)707-5722~4
- 팩 스 : (031)707-5725
- E-mail : hj@chicken.●.kr

- 웹하드(www.webhard.●.kr)
- ID : chicken PW : 1111
- ‘닭고기원고’ 폴더